(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프랑스 톨레랑스(Tolérance)의 재조명

1. 문제의 제기

□ 톨레랑스(관용)는 프랑스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공존의 원칙으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사상, 신념을 용인함으로써 공존을 가능케 하는 덕목을 지칭

* 이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프랑스사회가 중세 종교전쟁시기의 가톨릭과 신교의 갈등, 프랑스 대혁명 전후의 귀족·성직자 대 제3계급간의 갈등 등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데 대한 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o 톨레랑스는 ① 다른 신앙에 대한 수용(종교적 관용), ② 다른 도덕적 가치나 규범의 수용(사회적 관용), ③ 법과 실제 적용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시민적 관용) 등으로 예시되고 있는 바, 우리의 역지사지(易之思之)와 유사한 개념

□ 관용은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덜 독단적이고 증오가 적은 평화적인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게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

□ 그러나 신념·표현이 행동화할 경우 공공이익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며 도덕적 책임과 연계될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관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문제, 국익과 관련된 대외정책(신식민지정책, 핵정책 등)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평가

□ 우리나라와 같이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방식이 미정착된 상황에서 프랑스의 톨레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랑스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바, 이를 검토

2. 톨레랑스(tolérance)의 의미와 한계

□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집단들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존을 가능케 하는 덕목이 톨레랑스이며, 이것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프랑스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공존의 원칙임.

o "톨레랑스란 막을 수 없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프랑스 학술원의 정의)으로 "관용의 정신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신"으로 정의(Charles Zarka)
- 또한 공존을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는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함.

o 톨레랑스의 주요사례
- 종교적 관용(la tolérance religieuse) : 다른 신앙에 대한 수용 태도
- 사회적 관용(la tolérance sociale) : 자신의 도덕적 가치 또는 규범과 다른 것에 대한 수용 태도
- 시민적 관용(la tolérance civile) : 법과 실제 적용과의 차이를 인정

□ 톨레랑스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유를 향유하는 만큼 타인의 자유도 함께 존중함으로써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임.

o 또한 관용은 진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며 새로운 주장에 대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창의와 혁신을 가능케 함.

□ 그러나, 관용은 인본적 민주주의(humanistic democracy)의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핵심요소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신념·표현이 행동화할 경우에는 공공이익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며, 관용이 도덕적 책임과 연계될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음.

3. 톨레랑스의 연혁

□ 중세시대까지 진실은 종교(가톨릭)와 국왕에 기초하였으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시대를 맞아 이성(reason)에 따른 진실에 눈을 뜨게 됨에 따라 제3의 진실의 원천이 등장함.

o 톨레랑스란 인간이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성적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종교, 사상, 신념 등과 다른 종교, 사상, 신념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는 다른 개신교를 믿는 자유를 요구하는 종교적 톨레랑스로 부터 시작됨.

□ 1517년 Luther의 종교개혁주장이후 1534년 프랑스의 신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며 1562년~1598년간의 종교전쟁은 프랑스 전역을 피폐화시킴.

o 특히 1572.8.24 성 바르톨로뮤 날(St. Bartholomew's day)을 계기로 파리에서 시작된 신교도에 대한 학살은 신·구교도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킴.

□ 신교도였으나 왕위에 오르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한 앙리 4세(Bourbon 왕조의 시조)는 신·구교간의 대립을 끝내기 위해 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칙령(Edict of Nantes)을 공표함. (1598년 4월)

* 낭트칙령은 소위 "관용의 칙령"(Edict of Tolérance)이라고 불리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 신교도들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며, 신교도들의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공직 취임권을 보장

o 프랑스에서 관용이 낭트칙령에 의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

□ 루이 13세 및 14세 치하에서 재상을 지낸 Richelieu, Mazarin 등 추기경들은 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계속해 신교도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낭트칙령을 폐지(1685년)

o 그러나 Voltaire는 그의 관용론에서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종교적 톨레랑스는 결과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며, 사상의 자유가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비로소 톨레랑스가 완전한 가치로 정립됨.

* 1789년 프랑스 대혁명후 혁명의회는 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법 앞에 평등하며,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회적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선언(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함으로써 관용을 완전한 가치로 정립함.

□ 그러나 가톨릭이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시대 이후 공화국의 이념과는 다른 정치세력을 지원함에 따라 공화주의자들은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진정한 톨레랑스가 가능하다고 인식, 1871년 제3공화국 설립이후 정교분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

o 무종교원칙(laicité)은 종교와 관련 국가의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톨레랑스의 핵심요소이며, 프랑스가 관용의 국가가 가능하도록 한 기본원칙임.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4. 현대 프랑스에서의 톨레랑스 관련 주요이슈

□ 20세기 이후 현대적 의미의 톨레랑스는 ① 여성의 자유보장 ② 동성애자들의 자유 보장 ③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 등 3가지가 핵심이슈가 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 프랑스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제시를 폭넓게 수용하고 인내심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어 나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예) 흔하게 발생하는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으로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불평을 별로 표출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

□ 그러나, 프랑스라는 유일·불가분의 공화국(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에 완전히 동화된(assimilated) 시민에 대해서는 톨레랑스가 분명히 성립하고 있으나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

(ⅰ) 동화하지 않은 이민자 및 소수인종(ethnic minority)의 문제가 상존

- 특히 이민증가에 따른 이슬람문제는 이슬람이 정교일치인 종교인 점에서 프랑스공화국의 무종교이념과 충돌

(ⅱ) 톨레랑스는 서로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성(reciprocity)을 확보해야 하며 개별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재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

- 또한 폭력을 수반하는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 됨.

(ⅲ)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철저한 국익우선의 원칙이 적용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1) 이민 및 인종차별 문제

□ 2005.11월 파리교외 등에서 북아프리카 이슬람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약 3주간 지속된 바, 프랑스정부는 이민문제를 빈곤·실업 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소수인종이나 소수종교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

* 프랑스의 이슬람인구는 약 5백만명으로 유럽내지는 터키 다음으로 많은 이슬람인구가 거주 (독일 3백만명, 영국 150만명)

* 1,600개의 이슬람사원이 있으며 이민 2-3세의 청년실업율은 40%에 달하고 있음. (전체 청년실업율 20%)

o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문제를 둘러싸고 이슬람과의 분쟁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나 프랑스의 국가·종교분리 원칙에 따라 2004.3월 공립학교에서 현저한 종교적 표시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 89년, 96년 등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쟁(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작용한 여학생 퇴학), 2004년 이라크에서 프랑스 언론인 납치 인질사례 등

o 이는 과거 가톨릭의 우월한 지위배제를 위해 국가의 무종교성(laisité)을 확립한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정교일치인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톨레랑스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노정한 사례

* 현재 일부 정치인들(사르코지 내무장관 등)은 Affo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Chirac 대통령, de Villepin 총리 등은 공화국의 이상에서 후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2) 국가와 공공이익

□ 개인이익은 공동이익과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무엇이 공동이익인지를 결정하는 권한과, 개인이익과의 충돌시 공동이익이 우선하게 하는 역할을 정부와 관료가 담당함.

o 이에 따라 프랑스인들은 정부와 관료의 권위에 대해 존중하고 이를 신뢰함.

□ 불법파업인 경우에도 폭력시위가 아닌한 주동자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각자의 파업권리를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톨레랑스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폭력을 동반하는 법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엄격함.

(최근 사례)

- 2005.4 교육개혁법안에 대한 고교생의 반대시위시, 학교 점거를 주도한 학생대표를 기소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

  * 이는 95년 경찰(쟝달머리)의 불법 데모시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은 사례와 대비

- 2005.11 파리교외 등에서 발생한 소요시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전원 실형 선고

o 또한, 국가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국가이익에 관계되는 이견제기는 수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음.

* 2004.11.7 반핵관련 환경단체운동원이 핵폐기물의 철도수송에 반대하기 위해 철도에 누워 시위하다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은 바, 이는 핵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3) 대외관계 및 식민지 지배

□ 프랑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톨레랑스가 아닌 철저한 국익에 기초하고 있음.

□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핵보유정책을 방해하는 국제환경단체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쇄

o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좌·우파 모두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에서의 핵무기실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Green Peace의 선박을 뉴질랜드에서 87.7월 폭파시킨 사건도 사회당인 Mitterrand 대통령의 명시적인 승인 하에 추진됨.

□ 만인은 법 앞에 동등하다는 인식 및 톨레랑스의 예외중의 하나가 프랑스의 식민지배정책

o 뉴 칼레도니아 등 아직도 해외식민지를 유지하면서 과거 북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대한 미화 등 대외정책에 있어 톨레랑스의 한계를 노정

*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Martinique, Gauadeloupe, Guiana, Reunion 등 4개의 DOM(Départments d'Outre-Mer, 해외道로서 프랑스 국내에 있는 나머지 96개道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과 함께 남태평양 등지에 계속 해외영토를 보유함으로써 21세기에도 사실상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특히 New Caledonia의 경우 독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에 반해 군대를 증파하고 완전한 독립을 2013년 이후로 미룸.

o 지난 2005.2월 제정된 법률에 북아프리카 식민지배에 대한 프랑스의 긍정적인 역할을 역사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됨.

* 동 조항은 식민지배를 미화한다는 프랑스 내부 및 알제리 등의 반발을 야기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5. 평가와 시사점

□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정치이념들이 비교적 큰 충돌 없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비방과 중상이 아닌 정책대결 토론으로 입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오랜 톨레랑스의 전통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o 정교분리에 따른 laicité(무종교성)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 신념 등에 의한 타부가 없어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 이민자문제와 관련, 2005.11 소요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있긴 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보다 표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톨레랑스의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음.

o 유태인, 이슬람인구 등도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

o 외국인 부모에게 출생한 자녀에 대한 국적부여에서도 다른 유럽국가보다 훨씬 관대

□ 그러나 지난 2005.11 이민자들의 집중거주지인 대도시 교외에서의 소요사태에서 보듯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훌륭하고, 우수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프랑스 국회의원중 유색인종이 없으며 프랑스각료들의 총 보좌관 700여명중 이민 2세들은 10명에 불과

*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

(2006. 3. 30, OECD 대표부 보고자료 요약, 경제정책비서관실)

□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o 먼저 종교, 사상,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계층, 사회집단, 종교 상호간에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배려가 필요

o 다만 신념·표현이 행동화할 경우 공공이익에의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며 공존을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는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함.

※ 예

- 노조나 농민단체 등 이익집단의 평화적 시위는 존중하되 폭력시위는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 토대위에서 진행되는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일부 인사의 반발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대규모 국민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하는 쪽으로 국민의식을 고쳐 나갈 필요